



배포 일시	2023. 3. 23.(목)		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	책임자	과 장 김기용 (044-201-3674)
	산업입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이경민 (044-201-3677)
보도일시	※ 3.24(금) 08: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- 31일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 발족... '26년 착공 총력 지원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3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.
- 금번 회의는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 회의에서 발표한 「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,

※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(3.15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)

후보지		면적	중점산업	후보지		면적	중점산업
경기	용인 시스템반도체	710만㎡	반도체	전북	완주 수소특화	165만㎡	수소저장·활용 제조업
대전	나노·반도체	530만㎡	나노·반도체	경남	창원 방위·원자력 융합	339만㎡	방위, 원자력
충청	천안 미래모빌리티	417만㎡	미래모빌리티 반도체	대구	미래 스마트기술	329만㎡	미래차·로봇
	오송 철도클러스터	99만㎡	철도	경북	안동 바이오생명	132만㎡	바이오의약 (백신, HEMP)
	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	236만㎡	수소·미래차		경주 SMR (혁신원자력)	150만㎡	소형모듈원전 (SMR)
광주	미래자동차	338만㎡	미래차 핵심부품		울진 원자력수소	158만㎡	원전 활용 수소
전남	고흥 우주발사체	173만㎡	우주발사체	강원	강릉 천연물 바이오	93만㎡	천연물 바이오
전북	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	207만㎡	식품 (푸드테크)	총 15개소, 4,076만㎡			

- “중요한 것은 속도이며, 발표된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”고 당부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**세부 추진계획**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, 신규 **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**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**4월 중 완료**할 예정이다.

-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개발하였으나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LH 외에도 철도공단, 수자원공사, 지방 도시·개발공사 등으로 **다각화**할 예정이다.

○ 둘째,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*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.

* (공공기관 타당성조사) 공공기관이 ①총사업비 2천억 이상이면서 ②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1천억 이상 사업에 참여 시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(공공기관운영법)

○ 또한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**도심 융합특구** 개발을 본격화하여, 청년·기업공간과 R&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,

-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**첨단전략산업단지, 소부장특화단지, 스마트혁신지구, 캠퍼스혁신파크** 등을 연계 지원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.

○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,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, 「**범정부 추진지원단**」을 구성하여 오는 3월 31일 **킵오프(Kick-off)회의**를 개최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(기재부, 산업부, 중기부, 농림부, 환경부 등)와 지자체,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

-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,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해 ①인허가추진반, ②인프라지원반, ③기업지원반, 3개 분과를 운영하여,
 -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,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와 농지·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“인·허가 원스톱 서비스”를 제공하며, 용수·전력·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,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입지 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,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, 정부는 입지조성, 육성정책,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‘산업육성 3각 체계’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,
-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,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'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” 이라고 밝혔다.

